

05

양극 세력균형 체제(냉전)하에서 중소국의 외교적 선택

_유고슬라비아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 김철민

한국의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부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유고어과 졸업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국립대학교 역사학(국제정치사)
박사

주요 논저

- 『보스니아 역사: 무슬림을 중심으로』(2005)
- 『동유럽의 민족분쟁: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2007)
- 『발칸유럽 사회와 문화』(2008)
- 『한국전쟁과 동유럽』(2008)
- 『또 하나의 유럽, 발칸유럽을 읽는 키워드』(2009, 공저)

Contents

- 1 서론
- 2 소련과의 동맹
- 3 코민포름 분쟁과 소련으로부터의 탈동맹
- 4 한국전쟁의 교훈과 의미
- 5 결론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유고슬라비아는 국가 존립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와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과 외교 노선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

본 논문에선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나타난 양극 세력균형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역학구도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피하고 국가적 주권을 보장받으려 했던 중소국들의 사례 중 유고슬라비아를 선택해 그 외교적 선택과 정책을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 시기 유고슬라비아가 선택한 외교적 노선은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전에서의 승리와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선택된 '소련과의 동맹'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로는 사회주의국가 수립 이후 국가 운영과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소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1948년 코민포름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소련으로부터의 탈(脫)동맹'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는 소련과 코민포름 회원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을 겪어야 했던 유고슬라비아가 이후 외교 노선을 일부 수정해 미국 등 서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 가던 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양극 세력균형 체제의 충돌을 의미했던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외교 노선 수립, 즉 '비동맹주의를 수립'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양대 블록에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커다란 외교적 희망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양극 세력균형 체제, 비동맹주의, 유고슬라비아, 코민포름 분쟁, 한국전쟁

1. 서론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 핵심은 국가의 자주와 독립, 발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이 처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위치 그리고 국제 역학구도의 변화 속에서 그들에게 맞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외교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적 정치 발전 및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모여 공동체 기구를 창설하거나, 다양한 협력체를 구성해 경제, 외교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이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고 도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적 자주권과 독립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세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수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우선해 자국의 군비를 증강시키고 자체 방어력을 크게 증진시키려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e) 정책을 기초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 구도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내적 균형 정책은 그

실효를 크게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아닌 중소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중 하나는 바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에 입각한 동맹 정책(Policy of Alliance)의 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상대국의 힘과 자국의 힘을 조화시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세력균형 정책은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에서부터 기원되었고, 이후 한동안 유럽 내 국가체제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 왔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 국가로는, 동맹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세력균형 체제에 있어 균형자 역할을 했던 영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유럽 내에서, '국가를 중심 요소로 했던 세력균형 체제'는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약간은 다른 형태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즉, 이 시기 동안 국가들 간의 보다 강력한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다(多)자간 세력균형 체제' 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의 동맹에 맞서는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동맹체제가 등장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삼국 동맹과 미국·영국·중국·소련의 연합국 동맹이 서로 대치하는 형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력균형 참여국은 과거 핵심 축을 이루었던 유럽권 국가들에서 벗어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각 '블록 간 동맹체제' 구축으로 변화했는데, 이것은 냉전(The Cold War)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양극 세력균형 체제'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양차대전 기간 동안, 문화적 요소에 따른 심각한 민족 갈등을 경험하였던 유고슬라비아 또한 이러한 국제 역학구조 변화

의 흐름 속에 새롭게 편입되어야만 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상이한 민족과 역사적 경험을 지니며 오랫동안 계속된 민족 갈등에 시달려 왔던 유고슬라비아는 자국 내 민족 간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수립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블록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블록이라는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초창기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블록으로의 동맹 편입이라는 외교 노선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1948년 발생한 소련과의 코민포름(Cominform) 분쟁을 계기로 유고슬라비아는 소련 블록으로부터의 탈(脫)동맹을 시도하였고, 이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非)동맹 외교 노선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국제정치학적 분석을 통한 비동맹 외교정책의 특징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이러한 분석과 연구들의 상당수가 주로 미국 등 서구의 강대국적 시각과 자료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다는 아쉬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냉전 시기인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선택한 다양한 외교 노선과 정책을 유고슬라비아 현지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련의 외교정책 변화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유고슬라비아의 비동맹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티토이즘(Titoism/ Titoizam)'¹⁾의

1) 티토이즘은 크게 3개의 주요 정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경제·사회정책으로서의 '자주관리 제도(Self-Management/ Samoupravljanje)', 민족정책으로서의 '유고슬라비즘(Yugoslavism/ Jugoslavizam)' 그리고 외교정책으로서의 '비동맹주의(Non-alignment/ Politika nesvrstanosti)' 등을 들 수 있다. 티토하의 유고슬라비아에서 자주관리제도는 소련의 스탈린이 제시한 국가 중심의 중앙 집중적 통제체제를 벗어나 경제,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민족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극 세력균형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유고슬라비아의 외교정책인 비동맹 외교정책이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과 경험, 즉 첫째로는 1948년 소련과의 코민포름 분쟁이라는 배경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 동맹체제 간 충돌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분석할 것이다.

본 글의 구성을 보면 우선 2절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에 따른 유고슬라비아 내 민족 간 갈등과 충돌 양상을 보여주고, 티토(Josip Broz Tito, 1892~1980)와 그의 파르티잔(Partizan) 세력들이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는 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공산화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유고슬라비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양극화 된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소련과의 동맹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자신의 동맹체제내로 유고슬라비아를 보다 구속시키려 했던 소련의 전략과 이에 반해 이러한 간섭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티토와 스탈린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1948년 코민포름 분쟁의 의미를 소련으로부터의 탈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소련으로부터의 탈동맹 과정 속에서 한국 전쟁을 경험한 유고슬라비아가 미국의 계속된 구애와 1955년 후르시초프

민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이전의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를 대체할 '정치적 민족주의(political nationalism)'로 유고슬라비즘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전수립 이후 동·서양 블록하에서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으려 했던 티토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더불어 제 3세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기초로 대외적 외교역량을 확대하여 갔다. 본 논문에선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티토이즘의 한 축인 비동맹 외교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의 공식 사과가 담긴 '베오그라드 선언(Beogradska Deklaracija)'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블록으로의 편입보다는 비동맹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양극 세력균형 체제라는 국제 역학적 구도 속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선택한 외교 노선인 비동맹 외교정책의 형성 배경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비동맹주의의 국제사적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2. 소련과의 동맹: 2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수립

양차대전 사이, 유고슬라비아는 국가 운영과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내부적 민족 갈등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양상 및 전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연합국의 의도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남슬라브족 통일 왕국인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 슬로베니아왕국(Kingdom of Serbs, Croats and Slovenes/ Kraljevina Srba, Hrvata i Slovenaca, 1918~1928)'하에서 지속된 세르비아인과 다른 구성 민족들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세르비아는 새롭게 수립된 왕국을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대(大)세르비아주의'의 완성이라 생각하였고, 반면 크로아티아인과 슬로베니아인은 왕국 수립 전 맺었던 '크루프 협정(Krfskom paktu)'에 따라 신생 왕국은 각 민족들 간의 평등한 공동체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국 수립의 정체성을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은 계속 확대되어 1928년 경제대공황 이후 세르비아 왕정 중심의 독재 왕정 국가 선포를 불러왔다. 1929년 수립되어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던 '유고슬라비아왕국(Kingdom of

Yugoslavia: Kraljevina Jugoslavije)'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독일과의 합종을 통해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슬라비아왕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민족-국가(Nation - State)를 건설하려 했던 크로아티아인들의 노력과 저항을 들 수 있다, 반면 이를 막고 세르비아 중심의 남슬라브족 통일 왕국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 했던 세르비아인은 크로아티아인들과 계속 갈등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었다.

유고슬라비아왕국 내 민족 간 갈등과 왕국의 외교 노선을 둘러싼 충돌은 결과적으로 독일의 침공과 왕국 점령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28년 경제대공황 이후 등장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프랑스 등 과거 연합국과 정치, 경제적 관계 외에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 온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며, 이러한 교류를 점차 경제적 종속을 넘어 정치적 예측 단계로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1938년 뮌헨협정이 체결된 이후, 유고슬라비아왕국을 비롯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유럽 내 세력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으며,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보호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²⁾ 유고슬라비아

2) 뮌헨협정은 당시 체코의 슈테텐 지방을 둘러싼 협정으로 독일은 이 지역인구의 상당수가 독일인임을 내세워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슈테텐 지역을 체코로부터 할양받고자 하였다. 체코 정부는 이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은 이후 다른 지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약속을 받아내고 이 지역을 독일에 넘겨줄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러한 뮌헨협정이후 동유럽 국가들에선 서유럽 연합국들로부터의 지원과 안전보장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었고, 유고슬라비아왕국 또한 친독일, 이탈리아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했었다. 외교 노선 변화에 대한 세르비아인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치러진 1938년 11월 선거에서 스토야디노비치(Stojadinović)가 이끄는 여당은 54.1%(164만 3783표)를, 그리고 마체크가 이끄는 야당 연합진영은 44.9%(136만 4500표)의 득표를 차지했다. 비록 과반수를 넘겼지만, 민족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은 친(親)독일 노선으로 전향하였던 정부 여당이 실질적으로 패배했음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왕국의 위기는 더욱 더 증대된다. Ivan Božić, Sima Ćirković,

왕국 또한 독일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자체 무장 강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왕국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외교 노선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왕국은 다른 어떠한 동유럽 국가들보다 민족 간 갈등으로 대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확고한 외교 노선을 선택하지 못한 채 일련의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었다. 우선 세르비아인들은 독일로부터의 위협을 과거 전통적 우방국인 프랑스, 영국과의 동맹 구축 강화를 통해 벗어나고자 했던 반면, 역사적, 전통적으로 독일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였던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독일 등 구축국과의 관계 강화로 왕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9년 8월, 유고슬라비아왕국은 독일의 독립국 제안에 흔들리고 있던 크로아티아인들을 달래고 그들을 왕국 내에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크로아티아 농민당 대표였던 블라트코 마체크(Vlatko Maček)와 일련의 대타협(Sporazum)을 시도하였다.³⁾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졌고, 이후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따른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결국 유고슬라비아왕국을 분열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1940년 봄에 들어와 유고슬

Milorad Ekmečić & Vladimir Dedijer, *Istorija Jugoslavije* (Beograd: Prosveta, 1973), p. 441.
3) 이 협상에 따라 쓰베트코비치(Cvetković)를 수상으로 그리고 마체크를 부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등장하게 된다. 이어 크로아티아와 달마티아 그리고 슬라보니아 지방과 보이보디나 일부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자치국인 '크로아티아 바노비나(Banovina Hrvatska)'가 수립되었고, 마체크와 가까운 동지였던 이반 슈바슈치(Ivan Šubašić)가 이 자치국가의 수반으로 추대된다. 크로아티아인들이 중심이 된 이 자치 국가는 외부, 국방, 무역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 체계에 있어 자율권을 지니고, 왕국영토의 27%, 인구의 29%를 차지하였다. Petar Vučić, *Politička sudbina Hrvatske: Geopolitičke i geostrateške karakteristike Hrvatske*(Zagreb: Mladost, 1995), pp. 195~198.

라비아왕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프랑스가 독일 지배로 넘어갔고,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아래로 그리고 주변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구축군에 가담하게 되자 유고슬라비아왕국은 구축군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에 이른다. 프랑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유고슬라비아왕국은 외교 노선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40년 6월에는, 그동안 공산 혁명운동의 위협성과 과거 러시아 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던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왕국의 페테르 카라조르제비치 2세(Peter Karadordević II)는 구축군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독일의 계속된 압력에 굴복해야만 했다. 곧이어 세르비아인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반(反)정부, 반(反)독일 시위가 이어졌고,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었다. 쿠데타군은 독일과의 동맹 가입 약속을 파기한다고 선포하였고, 그 직후인 1941년 4월 독일군은 베오그라드를 비롯한 왕국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게 된다. 페테르 2세를 비롯한 왕국의 주요 관료들이 영국으로 망명한 가운데, 4월 12일 수도인 베오그라드가 점령되자, 유고슬라비아왕국은 4월 17일 마침내 항복 휴전협정에 사인해야만 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2차 세계대전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복잡하게 전개되게 된다. 우선 독일, 이탈리아 점령군과 유고 저항군 간의 싸움, 두 번째로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국가 수립하려는 파르티잔(Partizan) 세력과 세르비아 중심의 구(舊)왕정체제를 복구하려 했던 체트니크(Četnik) 간의 싸움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일에 점령당한 유고슬라비

아는 독일을 비롯한 주변 구축군들의 영토적 보상물로 영토가 분열되었고, 구축군에 점령당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여기서도 또한 다양한 반(反)독일 저항 단체들이 수립된다. 저항 단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세르비아 민족을 중심으로 대(大)세르비아왕국을 계속 이어가려던 세력 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고슬라비아 내 복잡하고도 다양한 민족 모두를 하나로 묶어 저항 운동을 전개하려던 움직임이었다.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저항 단체로는, 드라자 미하일로비치(Draža Mihailović)를 중심으로 한 체트니크 부대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대는 세르비아니즘을 바탕으로 세르비아가 중심이 된 왕국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티토(Josip Broz Tito)를 중심으로 한 파르티잔은 그 동안 문화적 민족주의에 젖어 민족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유고슬라비아 내 민족들에게 ‘형제애와 단결(Bratstvo i Jedinstvo)’이라는 당 강령을 내세우며 모든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진 보스니아와 몬테네그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던 티토는 파르티잔이 점령한 마을들마다 사회주의적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도입하여 갔다. 이후 이들 제도와 기구들은 병력 수급을 비롯한 파르티잔에 대한 지원활동, 친(親)공산주의 선전 그리고 공산당 행정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⁴⁾ 그 결과 1942년 11월, 훗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국가의 골격이 된 ‘유고슬라비아 민족해방을 위한 반(反)파시스트 혁명 위원회(AVNOJ: Antifašističko veće

4) Nikola Gačeša & Dušan Živković, *Istorija* (Beograd: Zavod za udžbenike i nastavna sredstva, 1993), p.187.

narodnog oslobođenja Jugoslavije, 이후 AVNOJ)' 제1차 대회가 보스니아 북부 비하치(Bihać)에서 결성된다. 대전 초기 망명 정부의 영향으로 체트니크 활동을 지원하였던 연합국은 파르티잔의 대(對)독일 저항운동의 성과가 시화됨에 따라 호의적 반응으로 변화하였고, 마침내 1943년 11월 개최된 테헤란회담에서 파르티잔에 대해 정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군사적 지원을 결정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유고슬라비아 내 독자적 사회주의국가 출범을 의미했던 AVNOJ 창설과 그 활동은 스탈린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소련이 당시 영국에 망명 중이던 유고슬라비아왕국과의 관계 설정 존속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동유럽 내 어떠한 독자적인 공산 세력의 대두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스탈린의 전술에서 기인하였다.⁵⁾ 이러한 소련의 정책은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대전 이후에는 보다 구체화된다. 1943년 9월 이탈리아의 항복과 더불어 구축군의 전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티토는 동년 11월 보스니아 야이제(Jajce)에서 열린 제2차 AVNOJ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왕국 정부의 법적 권한 박탈과 페테르 2세의 국내 복귀를 금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⁶⁾ 하지만 스탈린은 이러한 발표가 소련의 사전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티토에게 유감을 전달하였고, 모든 결정에 있어 소련과 사전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반 보쨌치(Ivan Božić)와 블라디미르 데디예르(Vladimir Dedijer) 등 유

5) Fred Singleton, *A Short History of the Yugoslav Peopl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p.197.

6) 또한 향후 국가형태에 있어 유고슬라비즘(Jugoslavizam)에 따라 민족 간의 평등에 기초한 연방제를 선택함으로써 훗날 민족자결권 선포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이 선언에 따라 민족위원회(Narodno veće)가 구성되었고, 중립 노선주의자였던 이반 리바르(Ivan Libar) 박사를 연방 의장으로, 그리고 티토는 수상 겸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

고슬라비아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독일과의 동유럽 지역 전투에서 과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던 소련은, 독일 점령군과 교전하고 있던 이들 지역의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스탈린의 동유럽 장악 전략은, 우선 이들 지역의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독일과의 교전을 통해 그 세력이 몰락하기를 기다리면서, 다음으로는 이를 대신할 친(親)소련 공산주의자들을 투입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내 공산 세력인 티토와 파르티잔의 선전은 스탈린의 동유럽 장악 전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⁷⁾

하지만 소련의 직접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파르티잔군은 독일 점령군, 크로아티아의 독일 괴뢰정권인 우스타샤(Ustaša) 정권 그리고 후에는 체트니크의 가세로까지 이어졌던 총 8차례의 진압 작전을 성공리에 이겨내게 된다. 파르티잔의 전과를 확인한 연합국은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진정한 대독일 항전 단체가 파르티잔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더 이상 유고슬라비아 국내로의 진군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소련군은 1944년 2월 마침내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고, 이에 자국 받은 독일은 5월에 들어와 파르티잔에 대한 마지막 공습을 감행했지만 연합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티토와 파르티잔에 대한 미국 등 연합국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스탈린은 친(親)소련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해 티토와 파르티잔을 인정하고 유고슬라비아의 독자적 공산국가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위한 소련의 역할은 1945

7) Ivan Božić, Sima Ćirković, Milorad Ekmečić & Vladimir Dedijer(1973), p.532.

년 2월에 열린 알타회담에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스탈린은 미국과 영국을 설득해 티토를 대통령에 그리고 왕국의 망명 정부 인사인 이반 슈바시치(Ivan Šubašić)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게 된다. 실제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는 유고슬라비아 향후 처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피력하였다. AVNOJ의 모든 활동들이 국제적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후 대의원들은 임시입법 의회 구성의 주축이 될 수 있었으며, 새롭게 수립된 정부의 구성원 또한 AVNOJ의 요원들로 상당수 채워지게 된다.⁸⁾ 이어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한 연합국들의 인준이 이어졌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이 1945년 3월 31일 새롭게 개설되는 등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한편, 1945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선 유고슬라비아 임시정부(Namesništvo)와 소련 최고정치국(Prezidijum Vrhovnog saveta Saveza) 간에 '우호 협력관계에 관한 협정(Ugovor o prijateljstvu)', '상호 도움과 전후 협력관계에 관한 협정(Ugovor o uzajamnoj pomoći i posleratnoj saradnji)'이 맺어진다.⁹⁾ 이어 1945년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CK KPJ: Centralni komitet Komunističke partije Jugoslavije)'를 유일 정당으로 하는 일당 독재를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사회주의국가 수립이 선포되게 된다.¹⁰⁾ 실제,

8) Branko Petranović, *AVNOJ i Revolucija* (Beograd: Prosveta, 1983), pp. 650~51.
 9) *Službeni list Demokratske Federativne Jugoslavije*, broj 40(12. Aprila 1945), pp. 341~344
 10) 1945년 11월 11일 임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체 743만 2469명의 유고슬라비아 유권자 중 88.66%가 투표에 참가한 당시 선거에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KPJ: Komunistička partija Jugoslavije)'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민전선(NF: Narodni front)'의 대의원들은 전체 투표자 중 90.48%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전체적 득표 경향을 살펴보자면, 이 선거에서

사회주의국가로 유고슬라비아가 그 기틀을 잡아가는 데 소련의 사회주의 수립 경험과 법률 체계 그리고 정부 구성에 대한 조언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은 거의 대부분의 법률 구성과 정부 조직에 있어 유고슬라비아의 모델로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의 외교적 밀착과 정치, 경제적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이어지게 되었다.

새롭게 정부를 구성한 티토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입었던 유고슬라비아의 인적, 물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개혁에 착수하게 된다.¹¹⁾ 국가 재건을 위해 파괴된 도시들을 복구하고 기간 시설 복구와 공장 재가동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1945년 '농업개혁(Agrarna reforma)'과 '집단농장화(Kolonizacija)'가 실행된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몬테네그로 등 남부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세르비아 북부인 보이보디나 등의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농업 계획에 따라 60여 만 가구가 농업 집단화에 동원되었고,

KPJ는 세르비아(Serbia)에서 77.16%를, 보이보디나(Vojvodina)에선 92.20%, 코소보 - 메토히야(Kosovo-Metohija)에선 97.68%, 크로아티아(Croatia)에선 91.77%, 슬로베니아(Slovenia)에선 95.29%,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에선 92.53%, 마케도니아(Macedonia)에선 96.82% 그리고 몬테네그로(Montenegro)에선 92.1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었다. Branko Petranović, *Jugoslavija na razmeđu(1945-1950)* (Podgorica: Crnogorska akademija nauka i umetsnosti, 1998), p. 173.
 11)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전쟁과 독일 등 구축국들의 착취로 인한 유고슬라비아의 인적·물적 피해는 막대하였다. 전쟁 이전에 비해 36.5%의 공장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52%의 철로, 23.4%의 기관차 그리고 16.1%의 열차가 전소되었다. 또한 61.5%의 대형선박과 66%의 소형선박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82만 2237개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의 전쟁물자 피해는 당시 미국 달러로 4억 6900만 달러(1달러= 44디나르(dinar))의 손실로 나타났다. 물론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인적피해에 있었다. 전쟁 중에 17만 명이 전쟁 포로로 억류되어야 했고, 32만 명이 피억류자로 고초를 겪었으며, 130만 명이 전쟁 피난민으로 그리고 27만 명이 전쟁 부역으로 끌려가야 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전체 인구의 23.5%에 해당하는 374만 명 이상의 국내 민족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해야만 했다. Dušan Bilandžić & Radovan Vukadinović, *Osnovne društvene promjene u Jugoslaviji i svijetu, 1945-1973* (Zagreb: školska knjiga, 1973), p. 32.

이들에겐 독일인 등 구축군인들로부터 빼앗은 165만 헥타르의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졌다.¹²⁾ 이어 모든 사기업에 대한 ‘국유화(Nacionalizacija)’가 시행되었고, 연방 정부는 국가 경제력과 방위력 증강, 인민 복지 및 사회환경 개선 그리고 소련식의 중공업 발전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력 증진을 목표로 둔 제1차 5개년 계획(1947~1951)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중공업 발전을 지향하려 했던 이러한 경제 개발 계획이 당시 농업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 수정을 지시하였다.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소련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들의 경제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해 갔으며, 그 결과 소련의 불만과 티토에 대한 불신 또한 확대되었다. 그 결과는 곧이어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의 1948년 코민포름 분쟁을 낳았고, 유고슬라비아의 소련으로부터의 탈(脫)동맹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코민포름 분쟁과 소련으로부터의 탈동맹

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으로부터의 직접 지원이 없었음에도, 티토는 전쟁 종결 이전부터 친(親)소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티토는 수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고, 소련과의 ‘우호 협정(ugovor o prijateljstvu)’과 ‘상호 원조 협정(ugovor o uzajamnoj pomoći)’ 그리고 ‘전쟁 이후 연맹에 관

12) Petar Marković, “Poljoprivredna Jugoslavije 1918~1991”, Đorđe O. Piljević ur, *Jugoslovenska država 1918~1998: Zbornik radova sa naučnog skupa* (Beograd: Institut za savremenu istoriju, 1999), p.309;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농업개혁과 농업 집단화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kola L. Gačeša, “Agrarne reforme i Kolonizacije u Jugoslaviji”, Đorđe O. Piljević ur, *Jugoslovenska država 1918~1998: Zbornik radova sa naučnog skupa* (Beograd: Institut za savremenu istoriju, 1999), pp.313~326 참조.

한 협정(ugovor o posleratnoj saradnji)’ 등 전후 소련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는 협정들을 맺기도 했다.¹³⁾ 전후 외교 노선에 있어 유고슬라비아는 연합국의 지원 속에 1945년 6월 26일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지만, 트르스트 문제 등으로 인해 서구와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¹⁴⁾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외교 노선 성향은 미국의 대유럽 부흥정책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대한 비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는 마셜플랜이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조직적 내정 간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어 미국의 제국적 야심을 본격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1947년 9월 코민포름을 스탈린과 함께 주도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 소련과의 동맹을 확고히 했음을 보다 분명히 하게 된다.¹⁵⁾ 이때까지도 티토는 가장 열정적 스탈린주의자였으며, 강력한 친(親)소련 동맹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1948년 6월 28일 발생한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의 코민포름 분쟁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논쟁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갈등의 핵심은 동유럽 완전 장악을 추구하려 했던 스탈린과 독자적 공산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발칸유럽에서 만큼은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던 티토 간의 외교 노선 정책의 충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탈린의 우려와 반대에

13)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p.452.

14) 트르스트(Trieste / Trst)를 둘러싼 이탈리아와의 국경조정 문제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4년까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 코민포름 분쟁 이후 추진해 왔던 친(親)서구 정책을 포기할 명분을 얻게 된다. Branko Petranović(1998), pp.163~165.

15) 1947년 9월 서부 폴란드 크라코노슈(Krakonošim)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민포름 본부로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가 결정되었다. 결정 배경에는 코민포름 본부를 유고슬라비아에 들으로써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부를 감시하고, 유고슬라비아를 소련의 영향력하에 계속 두려는 스탈린의 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Ranko Petković, *Jedan Vek odnosa Jugoslavije i SAD* (Beograd: Vojnoizdavački i novinski centar, 1992), pp.83~85.

도 불구하고, 티토는 유고슬라비아 및 발칸유럽의 공산화를 위해 그리스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트루스트 둘러싼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이탈리아와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 노력은 이후 엔베르 호자(Enver Hoxa)의 알바니아 공산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스탈린은 티토의 독자적 외교 정책과 영향력 확대 추구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反)소련 운동의 모델이 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 갈등은 이러한 외교 정책상의 충돌 외에도, 유고슬라비아 국내 전반에 있어 소련의 요구와 영향력 확대 의도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기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의 도움을 얻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소련식 모델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소련의 예측화와 지나친 내정 간섭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브란코 페트라노비치(Branko Petranović)는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상황과 역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소련식 법률 체계와 정부조직 구성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유고슬라비아가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소련의 경험은 여러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소련식 체계와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답습은 또한 ‘양날을 지닌 칼(mač sa dve oštrce)’로서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를 크게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유고슬라비아 현실에 맞는 헌법체계 수립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념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나 독창적 논의가 금지되다 보니 모든 분야에 있어 여러 경직된 현상들을 야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실제, 소련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모든 동유럽 국가를 직접적인 영향력 하로 편입시키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1947년 말 스탈린이 소련 최고위원회와 공산당 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해 동유럽을 소련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⁷⁾

여러 경로를 통해 티토는 동유럽 각국에 대한 소련의 무리한 요구와 압력이 사회주의국가 간의 평등 관계와 지속적 발전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어 각자의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련이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러한 생각이 사회주의국가 간 연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자칫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¹⁸⁾ 1948년 5월 9일, 수차례의 비밀 회의를 통해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소련의 일방적 종속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6월 29일엔 코민포름에서 제기된 소련식 사회주의로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⁹⁾ 이어 1948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불가리아 부카레스트 코민포름 대회에서, 소련과 그 회원국들은 소련 및 소련 정책에

16) Branko Petranović(1998), pp.329~331.

17) Dušan Bilandžić & Radovan Vukadinović(1973), p.42.

18)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에 오고 간 팩스와 전보 내용은 Branko Petranović & Momčilo Zečević, *Jugoslavija 1918-1988: tematska zbirka dokumenata* (Beograd: RAD, 1988), pp.910~920 참조.

19)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인민회의의 여러 결의 내용은 *Komisija za Međunarodne odnose i veze CK SKJ*, fond br. 507, faks br. III.와 *Prezidijum Narodne skupštine FNRJ*, fond br. 15, faks br. 16. 참조. 그리고 소련과의 관계 설정의 재필요성을 논의한 유고슬라비아 정치국에서의 비밀 회담에 관한 서류들은 *Predsedništvo Vlade FNRJ međunarodni odnosi(1945-1952)*, fond br. 50, faks br. 44. 참조.

대한 불신 그리고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들과 소련의 외교정책을 동일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고슬라비아를 코민포름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어 '경제 협력 협정(ekonomski saradnji ugovor)'을 비롯해 유고슬라비아와 코민포름 회원국들과 맺었던 모든 우호 협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경제 봉쇄 및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소련의 압박은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과 뒤이은 한국전쟁의 종결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반면,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간의 결별을 지켜본 서유럽 각국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은 유고슬라비아와 소련과의 갈등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하며, 유고슬라비아라는 다윗을 도와 소련이라는 골리앗을 무너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당시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의 득세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던 서유럽 각국들은 유고슬라비아가 '유럽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9년 10월 중국이 공산화된다. 중국의 공산화는 미국과 서유럽 각국들에게 소련과 사회주의 세력들의 전세계 공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는 우려를 확대시켰고, 소련 블록으로부터 이탈해 나왔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 또한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공산화는 코민포름 분쟁 이후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하에 놓여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와 그 지도부에게 엄청난 파장과 우려를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다음 타깃이 누가 될 지에 대한 우려 속에, 유고슬라비아 정부부는 서독 혹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외교 노선의 구축이 절실해졌다. 1949년 12월 '유고슬라비아 제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III plenumu Centralnog komiteta komunističke partije Jugoslavije)'에서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부는 유고슬라비아의 향후 발전적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외교적 파트너 수립의 필요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선택적 전략으로 다른 블록, 즉 미국 등 서구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보다 확실히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²⁰⁾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외교 노선 변화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화답하였고, 이후부터 '유고슬라비아의 탈(脫)소련 동맹'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의 분석에 따르자면, 당시 미국은 소련 블록의 세력 약화를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유고슬라비아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 블록으로부터 이탈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외교적 지원과 군사적 안보 약속을 통해, 소련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결정은 첨예한 양극 세력균형하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이를 위해 미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선 긴급 구호물자 및 주요 전략물자들을 비롯한 경제 원조를 유고슬라비아에게 신속히 제공하였고, 1949

20) 이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선 *Komisija za Međunarodne odnose i veze CK SKJ*, fond br. 507, faks br. II/7 참조

21) Ranko Petković(1992), pp.91~93.

년 말에 들어와서는 2000만 달러의 긴급 차관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된다.²²⁾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1949년 12월 대사관 발표를 통해 유고슬라비아의 안보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와 동일하며, 만약 유고슬라비아가 침공받을 시에는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²³⁾ 또한 미국은 중국 공산화에 따라 타이완을 대신해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정부를 UN안보리이사국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소련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소련 블록으로부터 이탈해 나온 유고슬라비아를 UN비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 추천하여 1950년 1월부터 제3차 UN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도움을 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 UN비상임이사국 선임은 유고슬라비아의 외교사와 비동맹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유고슬라비아는 UN안보리에서의 발언권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가해지던 경제, 정치적 압박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었고, 코민포름 회원국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자신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던 한반도에서 발생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을 통해, 유고슬라비아는 당시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어느 한 블록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위협과 안보적 위협을

22) 이후 미국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다시 확대되었다. 실제, 1950년부터 약 3년간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자, 티토는 긴급 지원금을 미국에 요청하였고, 트루먼은 곧바로 긴급 위원회를 열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지원금으로 5000만 달러 이상의 긴급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후, 미국 행정부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자금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유고슬라비아와 ‘공식적인 수혜 원조 체계(sistem redovnog dobijanja sredstva)’를 구축하기까지 하면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Radmila Milentijević, “Politika Sjedinjenih Američkih Država prema Jugoslavije”, Đorđe O. Piljević ur, *Jugoslovenska država 1918-1998: Zbornik radova sa naučnog skupa* (Beograd: Institut za savremenu istoriju, 1999), pp.161-162.

23) John C. Campbell, *Tito's Separate Road* (New York: Harper & Row, 1967), p. 17.

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한국전쟁의 교훈과 의미: 비(非)동맹 외교정책으로의 전환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은 유고슬라비아가 새로운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데 큰 교훈을 안겨주었다. UN에서의 활동을 통해 유고슬라비아는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구도와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양대 블록에 가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이들 간의 공통된 유대감을 기초로 새로운 외교 노선 구축이 가능하리라는 점도 인식하게 된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소식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하에 놓여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 여러 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문헌과 분석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양극 간의 냉전 격화가 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러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전쟁 양상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의 지역 전쟁을 벗어나 블록 간 국제 전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등 서구와의 외교 노선을 강화할 수 있었고, 반면 소련으로부터의 탈동맹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외교 노선, 즉 비동맹 외교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외 없이 냉전을 언급한다. 냉전을 둘러싼 논쟁을 둘러싸고 전통주의와 수정주의 학파 등이 존재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문헌들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냉전의 기원이 미국

과 소련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당시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출현했다는 후기 수정주의 학파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차 대전 사이 형성된 영국을 비롯한 다극 체제 (Multipolar System)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 체제(Bipolar System)로 전환된 국제적 상황 속에서 냉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결과적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살아남게 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경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양극화된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장벽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곳곳에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세력들의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련이 미국 등 서구에게 약속한 동유럽에서의 자유선거는 무시되었고, 이어 베를린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 양극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즈음, 아시아에선 소련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북방 4개 섬을 강제적으로 편입시켰고, 이어 1949년 10월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불어 1949년 소련의 원자탄 개발 성공이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는 소련의 세계 점령 계획이 곧이어 실행

24)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고립주의를 탈피하였고, 뒤이어 서유럽 전역은 물론 그리스, 터키 외에도 일본과 한국 등 전 세계로 군 주둔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소련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미 유럽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당시 지상군 천만의 병력을 가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 거의 모든 동유럽 지역에 자신들의 군 주둔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직후 발생한 국제적 상황과 당시 양대 세력 간의 합의에 따른 '세계 분할의 황금률'은 결과적으로 양극 세력균형 체제와 양대 블록 간의 냉전을 불러온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ranko Petranović, *Istorija Jugoslavije 1918-1988, knj. III*. (Beograd: Nolit, 1988), pp.10-13; 냉전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D. 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1960* (Garden city: Doubleday and Co., 1961) 참조.

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블록을 지키고 그 이념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와 힘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반면 한반도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속해 있던 유고슬라비아에 한국전쟁 발발은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소련의 유럽 침공을 위한 예비 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공포와 관심을 불러왔다. 실제, 당시 소련 내 유고슬라비아 스파이들이 보내준 여러 비밀문서와 자료에 따르면, 스탈린은 1950년 여름 유고슬라비아 침공 계획을 수립해 놓았던 걸로 보인다. 국립기록보관소(Arhiv Jugoslavije)에 수록된 외교 문서들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는 매일 같이 소련제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현상과 유사하게 유고슬라비아 국경 전역에선 빈번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독단적 결정으로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소련 위성국들의 공격 일시는 약간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처음엔 북한군이 남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 거의 한반도를 장악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1950년 가을로 연기되었지만, 곧이어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함에 따라 1951년 봄으로 재차 연기된다. 하지만 스탈린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군사개입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자신의 이해 영역(Interest Sphere)에 대한 방어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 침공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²⁵⁾

한국전쟁 기간에 유고슬라비아는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25) Vladimir Dedijer, *Dokumenti o 1948, knj. treća* (Beograd, 1979), pp.138-140.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즉, 어느 한 블록에 대한 지지는 곧바로 유고슬라비아가 다른 블록의 핵 폭탄적 위협과 더 나아가 군사적 침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이고도 막대한 지원과 소련의 직간접적인 위협에도,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전쟁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미국과 소련 양대 블록 어디에도 찬성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분석과 의견 개진에 있어서도 양대 블록의 주장이 아닌 전혀 다른 자신만의 ‘제3의 주장과 길’을 선택하곤 했다.²⁶⁾ 실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곧바로 UN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한국 침공을 비난하는 성명서와 함께 결의를 이끌어 내는 자리에서,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은 채 “안보리는 즉시 적대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간단한 성명서와 함께 미국의 결의안에 기권하였다.²⁷⁾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나 소련 모두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당시, 코민포름 분쟁 이후 동유럽의 신문과 여론들은 유고슬라비아가 미국 제국주의 캠프 속에 들어갔다고

26) 실제, 1950년 9월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에드바르트 카르델리(Edvard Kardelj)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강대국들이 한국 민족의 민족통일과 해방을 위한 열망을 이용해 두 개의 이해지역으로 나눈 후, 자신의 헤게모니 확대를 기도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확인하듯 한반도의 경우처럼 강대국들의 이해 지역에 속해 있는 유고슬라비아가 만약 어느 하나의 블록에 편입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Politika, “Izjava druga Edvarda Kardelja o stavu FNRJ prema ratu u Koreji”, god, XLVII, 6(septembar, 1950); Savezni sekretarijat za inostrane poslove, *Dokumenti o spoljnoj politici Socijalističke Federativne Republike Jugoslavije 1950* (Beograd: Jugoslovenski pregled, 1993), pp.206-208.

27) Politika, “Savet bezbednosti usvojio rezoluciju o obustavljanju neprijateljstva u Koreji”, god, XLVI, 28(jun, 1950).

선전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러한 소문을 확산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 당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유고슬라비아는 미국의 결의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하기도 어려웠다.²⁸⁾ UN에서 보인 유고슬라비아의 모호한 외교적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련의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다. 미국은 유고슬라비아 UN대표에게 보낸 비밀 전문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외교적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비밀 회신을 통해 티토는 “우리의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어느 한 블록에 속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로 계속 남는 게 유리하며, 현재 이를 위한 외교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하였다.²⁹⁾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일련의 UN 결의 및 투표권 행사를 지켜보면서 비상임 국가들 중 인도와 이집트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들 국가들은 한국전쟁이 격화되던 1950년 7월 7일 안보리 제476차 회의에서 한국전쟁에 파견된 UN군을 미군의 지휘 아래 두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유고슬라비아와 함께 기권함으로써 당시 국제 역학 구도를 바라보던 서로의 공통된 입장을

28) 비밀문서를 통해 확인해 볼 때, 실제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이 전쟁과 관련한 모든 결의에 대해 기권하겠다는 외교적 전략을 이미 수립해 놓았었다. 이러한 당시의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입장은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던 마테스(L. Mates)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arko Bekić, *Jugoslavija u Hladnom Ratu: Odnosi sa velikim silama 1949-1955* (Zagreb: Globus, 1988), p.160.

29) Komisija za Međunarodne odnose i veze CK SKJ, fond br. , 507 fac. br. , III/41, 28(jun, 1950).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UN에서의 일련의 결의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사전 교감과 입장 정리를 보다 견고히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예로는 1950년 9월 제5차 UN총회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을 종결 짓고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유고슬라비아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5차 UN총회는 한국전쟁에서는 물론 유고슬라비아 외교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획을 그은 자리라 분석할 수 있다. 경제, 정치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총회장인 뉴욕에 티토의 가장 측근 중 한 명인 에드바르드 카르텔리(Edvard Kardelj)를 의장으로 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제5차 UN총회의 주요 의제는 '중공의 UN 가입과 안보리이사국 부여', 그리고 '한국전쟁 해결을 위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인도 대표인 라우(Benegal Rau)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한국전쟁의 중단과 국제적 긴장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공의 UN 가입과 소련의 안보리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실제, 인도는 중공을 외교적인 국가로 받아들인 영연방의 첫 번째 국가였으며, 소련 블록 밖에 있던 국가들 중 베이징에 대사관을 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다. 중공의 UN 가입 요구에 대한 미국과 서구 진영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고슬라비아는 UN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인 중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역설하면서 인도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³⁰⁾

30)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UN총회에서 타이완 대표의 철수를 내걸었고, 반면 미국 등 서구에선 우선적으로 북한군의 38선 너머 퇴각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공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부여와 한국전쟁 해결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 제안을 거부하게 된다. Đ. Radenković i D. Stojiljković, *Koreja* (Beograd: Glas, 1950), p.33.

UN 제5차 총회에서는 향후 유고슬라비아의 외교정책이 담긴 원칙들이 발표되는 데, 이 원칙들은 훗날 비동맹 외교 노선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카르텔리가 밝힌 연설문의 주요 내용들 중 하나는 양극화된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UN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카르텔리는 UN이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국제기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문제점, 즉, UN이 강대국 이념 확대의 선전장으로서 이용되는 문제점, 약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강대국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점, 한두 개의 강대국에 의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끌려 다녀야 하는 문제점, 마지막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공정한 경제 협력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카르텔리는 이러한 문제점 중 특히 강대국들의 외교정책과 전략에 따라 거의 모든 세계 나라가 서로 편을 가르고 강대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강력히 비판하였다. 카르텔리는 “세계 모든 국가가 단지 한두 개의 강대국 헤게모니 사이에 선택돼야 한다는 가설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선택 외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존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 길을 찾는 데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며, 그 길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 인류를 위한, 국가 간 민주적 관계가 수립된, 외세의 내정 간섭이 배제된, 그리고 모든 분야에 국가 간 협력이 전제된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게 된다.³²⁾

31) Miro Popović, “Pregled aktivnosti jugoslovenske delegacije na Petom zasjedanju Generalne skupštine OUN” *Trideset dana*, br. 58-59, novembar.-decembar(Beograd, 1950), p.69.

32) Savezni sekretarijat za inostrane poslove(1993), p.214.

카르텔리가 UN총회에서 밝힌 이러한 입장과 원칙은 이후 유고슬라비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이 되었으며, 비동맹 외교 노선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앞서의 원칙을 기초로 유고슬라비아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카르텔리는 한반도 분단에서부터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 또한 한민족의 미래를 간섭하고 자신의 블록으로 편입시키려는 강대국들의 팽창정책과 세계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전쟁을 둘러싼 UN에서의 발언과 결의 과정을 통해 비동맹주의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인도와 이집트 등 자신과 비슷한 길을 가길 원하는 동반자들을 찾아 1950년대 말 이후로 제3세계 블록 구성에 있어 주요 리더 국가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냉전이라 불리는 양극화된 세력균형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양극 세력균형 체제의 틀이 잡혀가고 있던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 양대 블록 간의 팽팽한 긴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중소국들은 전후 복구 및 새로운 국가 질서 수립에 따른 혼란 그리고 영향력 아래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강대국의 강요와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중소국들은 스스로의 자주권과 독립권을 지키고, 정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외교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했었다. 이러한 연구 배경 속에 본 논문에선 양극 세력균형 체제가 정착 되어가던 시기인 2차 세계대전부터 양극 간의 충돌로서 나타난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중소국가

중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중립적 외교정책을 모색하였던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를 대표 사례로 선택해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의 중소국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가 존립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와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었다. 우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티토와 유고슬라비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와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위한 전략에 따라 '소련과의 동맹'을 모색해야만 했고,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성공한 이후에는 국가 운영과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소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1948년 코민포름 분쟁을 계기로 '소련으로부터의 탈(脫)동맹'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소련과 코민포름 회원국들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을 겪어야 했던 유고슬라비아는 이후 외교 노선을 일부 수정해 미국 등 서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UN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한국전쟁을 지켜보면서 점점 고착화돼가던 양극 세력균형 체제하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외교 노선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선택한 제3의 외교 노선인 '비동맹 외교정책'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한국전쟁의 종결에 따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1955년 후르시초프의 '베오그라드 선언'과 1956년 티토의 '모스크바 선언'이 이어지면서 보다 확실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는 서구와의 평화공존론을 내세우며, 티토가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평등한 관계 수립' 및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각자의 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망을 기초로 티토와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는 비동맹 외교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복원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서구로부터의 지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동맹주의로 불리는 유고슬라비아의 외교 노선은 국가 존립 및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양대 블록 어디에도 가입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강대국들의 이해 영역 밖에서도 그들 자신의 국가 주권과 독립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비동맹주의의 수립은 냉전의 양대 블록하에서 어느 한 쪽 블록으로의 일방적 선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던 여러 약소국들에게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해 주었고, 자신을 둘러싼 국제 여건상 어느 한쪽 블록에 속하기 어려웠던 국가들에게는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며, 평화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자주권과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 접수일 2009.06.29

심사 완료일 2009.07.27

The Diplomatic Selection of Small and Medium States under the Bipolar System

_A Case Study on the Diplomatic Policy of Yugoslavia

Kim, Chul-Min

Department of South Slavic Studie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rom the Second World War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former Yugoslavia has experienced various crises and threats, so it has tried to establish various diplomatic strategies. In this paper, with a focus on the modern history of Yugoslavia, I analyze the selection of diplomats and the implementation of diplomatic policy of small and medium states, concentrating on the avoidance of war and the protection of sovereignty under the Bipolar Syste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diplomacy of the former Yugoslavi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associated with their alliance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The diplomatic strategy of this period is noted for its efforts to win the Second World War and to establish a socialist state.

The second period is associated with Yugoslavia's attempts at secession from its alliance with the Soviet Union. Before and after that period, conflicts between Yugoslavia and the Soviet Union expanded due to the Soviet Union's interest in interven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Yugoslavia despite Yugoslavia not being open to this intervention by the Soviet Union.

The third period is noted for the aggressive threat of the Soviet Union to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isolate Yugoslavia in order to make Yugoslavia conform and Yugoslavia's efforts to try to find various assistance from the West. Especially in this period, Yugoslavia could establish new diplomatic strategies for security. Namely, it could promote a 'a policy of nonalignment', influenced by the Korean War, which meant a collision with a bipolar strategy. And through this, Yugoslavia could offer diplomatic hope to non-aligned states which couldn't participate in the First or the Second World.

- Keywords

bipolar system, nonalignment, Yugoslavia, Cominform dispute, Korean War